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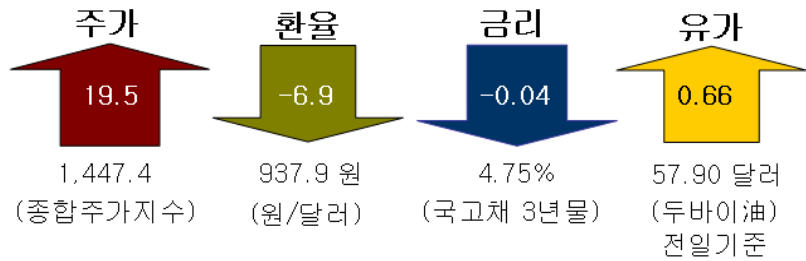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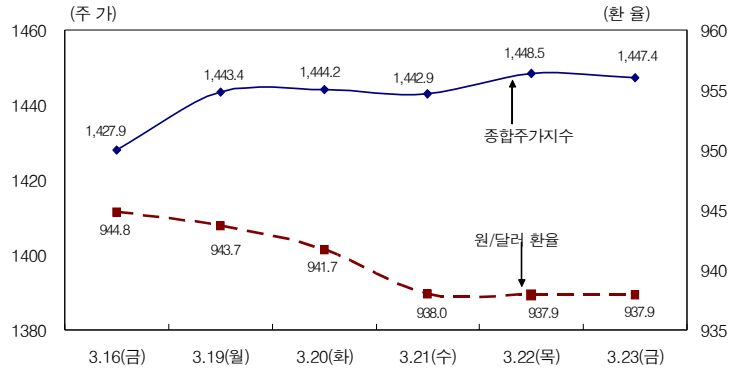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한국경제 선진화, 이제부터 시작이다
- 한·미 FTA 타결보다 관리가 성공의 관건

**BETTER THAN
THE BEST!**

月間 主要 經濟 指標 (3.16~3.23)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한국경제 선진화, 이제부터 시작이다	
- 한·미 FTA 타결보다 관리가 성공의 관건	1
주간 경제 동향	24
□ 실물 부문 : 지표 성장률과 체감 성장률의 괴리 지속	24
□ 금융 부문 : 국제 금융 시장 불안정 다소 완화	25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산업전략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지식산업실 : 임 상 수 연구위원 (3669-4125, happylims@hri.co.kr)

Executive Summary

□ 한국경제 선진화, 이제부터 시작이다 - 한·미 FTA 타결보다 관리가 성공의 관건

1. 한·미 FTA 타결 배경과 내용

한·미 FTA 타결 예상

한·미 FTA 8차 협상 및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경쟁, 정부조달, 기술장벽, 환경 등 4개 부문에 대해서는 완전타결을 이루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타결된 분야에서는 1~2개 부문 정도의 과제만 남아 사실상 전분야의 최종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은 신속협상권이 마감되는 3월 30일 이전에 일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국은 미국 의회와의 재협상을 피하기 위해서 적어도 '낮은 수준의 타결'이라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타결 배경

지역주의의 급진전, 신흥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 등에 따라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국가경쟁력의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 한·미 FTA 협상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FTA를 통한 對美 시장 경쟁력 강화, 통상마찰 감소, 국가신뢰도 증진에 의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도 한·미 FTA 타결의 배경이다.

2. 한·미 FTA 타결의 손익계산서

한·미 FTA의 성공의 열쇠는 타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관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한국경제는 한·미 FTA 타결을 기점으로 향후 선진 경제를 이루느냐 아니면 더 혼란에 빠져 성장 지체의 늪에 빠지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따라서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 활용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

한·미 FTA의 체결로 한국은 생산 및 고용 증가, 후생수준 증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 철폐, 기술의 상호 보완 등의 효과는 생산을 증대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과의 기술 제휴 등으로 국내 부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국내 경제의 對日 의존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의 신뢰도가 개선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해외직접투자의 유입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한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 및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사회 시스템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한·미 FTA는 단기적이라도 한국내 양극화 현상의 심화, 피해부문 대응 비용 발생, 미국 경제 동조화 현상 심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한·미 FTA의 체결은 경쟁력이 약한 부문과 강한 부문 사이의 경쟁심화로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농업을 포함한 피해부문에 대한 대응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이 미국 경제의 변화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한·미 FTA로 인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대립이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2) 산업별 영향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는 국내 제조업에 관세철폐 및 비관세 장벽 완화로 인한 수출증대 및 무역전환 효과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내 시장 개방 확대로 수입증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이다.

(긍정적인 영향) 자동차, 철강산업, 섬유산업 등의 분야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면, 승용차와 화물차는 추가적인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산업의 경우, 관세 폐지에 따르는 수출증대 효과는 미미하지만 미국의 한국 철강 수출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완화되어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섬유산업과 부품소재 산업 역시 관세 폐지로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품소재 산업의 경우 일본에 의존했던 수입선이 미국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무역 전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對日 무역수지 적자 축소도 예상된다.

(중립적인 영향) 전자제품, 신발산업, 제지인쇄업 등의 분야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한·미 FTA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제품 중 가전제품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업용 전자제품은 수입이 증가하고 전자부품의 경우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발산업 및 제지인쇄는 관세가 철폐되어도 수출 및 수입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적인 영향) 반면 한·미 FTA는 기계산업, 화학제품 등의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산업의 관세율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될 경우, 일반기계, 전기기계, 금속 산업 모두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로 화학제품의 관세가 철폐되면,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과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정밀화학의 경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를 통해 서비스업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의 대다수 중소 서비스 업체들은 미국에 비해 가격 및 품질 경쟁력에서 뒤떨어져 있으므로 서비스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

(농업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값싸고 질 좋은 농·수·축산물이 소비 시장에 들어와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농업은 미국 상품과의 경쟁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당수 영세 농업인의 퇴출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 및 고용 불안은 농업의 식량안보와 같은 다원적 기능을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3)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의 체결로 한국의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제도, 관습 등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의명령제 도입은 기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며, 정부조달 시장 개방은 미국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미국 신규 시장 진출의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국내 기업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 심화와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의 가속화 압력에 의한 제도 개선에 따르는 경영비용이 증가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3. 한·미 FTA 타결 이후 국가 경제 선진화 과제

1) 정부 전략

한·미 FTA를 계기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여, 닛크래킹(Nut-Cracking) 상태에서 탈출하고, 동북아 중심 국가로 설수 있는 경제의 선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 7대 긴급 과제

특히 한·미 FTA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① 거시 정책 : 시장경제 원리와 사회 안전망 확립

(시장경제 원리 정착) 일관된 경제 정책을 통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는 거시경제 지표의 안정을 통해 최적의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회 안전망 확립) 한·미 FTA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 구조조정 지원 및 피해근로자를 위한 산업피해구제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② 산업 정책 : 부품소재 산업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급기지화, 기술 혁신형 부품소재 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경우, 이들과의 전략적 제휴와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③ 통상 정책 : 對美 수출 시장 확대와 동북아 중심 시장 형성

(對美 수출 시장 확대) 한·미간 기술 협력 등으로 세계 일류 상품의 육성을 통해 한국 기업의 對美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동북아 중심 시장 형성)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동북아 경제의 산업·금융 중심지로 부상하도록 하며, 신흥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④ 노동 정책 : 노사 상생체제와 인적 시장의 국제화 유도

(노사 상생체제) 제반규제 완화와 노사간 협력 체제를 유지하여 노동 시장의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

(인적 시장의 국제화) 미국 등 선진 인력의 흡수와 국내 인력의 해외 진출을 위해 ‘이민정책’과 ‘해외 근로자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⑤ 기업 정책 : 규제 혁파와 적대적 M&A 및 역차별 방지

(규제 혁파)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를 포함한, 각종 기업 규제 등을 혁파하여 대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적대적 M&A 및 역차별 방지) 한·미 FTA를 통해 한국 기업이 받을 적대적 M&A 및 역차별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⑥ 농업 정책 : 국내 농업의 특화 산업화와 기업화

(국내 농업의 특화 산업화) 국내 농산물이 대외 경쟁력을 갖추어 고부가가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아닌 산업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업화) 특히 미국의 기업농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규모가 갖추어진 기업농이 필요하며, 기업농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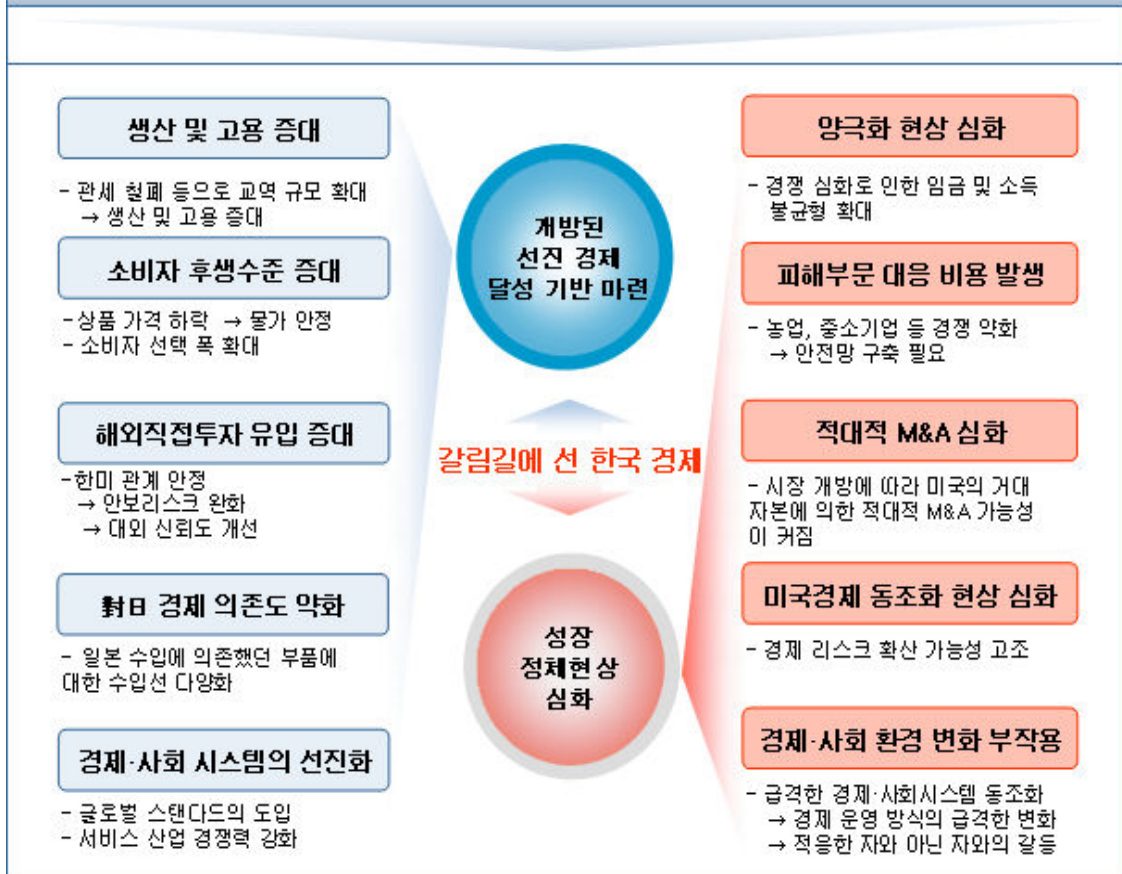
⑦ 한·미 FTA 경제 선진화 기획단 운영

노·사·정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미 FTA가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차질 없는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FTA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선진화 과제를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개방화 시대에 맞는 의식과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기업의 대응 방안

미국의 선진 기업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영능력 및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북미 시장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한다. 첫째, 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선진기술과 경영방식을 습득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對美 수출에 부합하는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가격 및 품질이 미국 기업보다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R&D 투자를 해야 한다. 셋째, 기업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갖추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의 시사점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노력

정부 전략	국가 경쟁력 제고, 동북아 중심 국가 지향, 넛크래킹(Nut-Cracking) 상태에서의 탈출을 위한 국가 경제의 선진화 전략 본격 추진
7대 긴급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 정책 : 시장 경제 원리 및 사회 안전망 확립 ➢ 산업 정책 : 소재부품 산업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 ➢ 통상 정책 : 對美 수출시장 확대와 동북아 중심 시장 형성 ➢ 노동 정책 : 노사 상생체제와 인력시장의 국제화 유도 ➢ 기업 정책 : 규제 혁파와 적대적 M&A 및 역차별 방지 ➢ 농업 정책 : 국내 농업의 특화 산업화와 기업화 ➢ 한·미 FTA 경제 선진화 기획단 운영 : 향후 비준 절차, 갈등 해소 등 보완대책 수립
기업 전략	선진 경영 능력 제고, 제품의 경쟁력 향상, 북미 시장 개척
과제	➢ 전략적 제휴, R&D 투자 증대, 기업 이미지 제고

□ 한국경제 선진화, 이제부터 시작이다 - 한·미 FTA 타결보다 관리가 성공의 관건

1. 한·미 FTA 타결 내용과 배경

○ (8차 협상 및 고위급 회담까지의 결과) 한·미 FTA 8차 협상 및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완전 타결 또는 1~2개 부문 정도의 과제만 남기는 등 사실상 전분야의 최종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음

- 타결 내용 : 경쟁 및 정부조달에 대한 협상은 타결 되었으며, 기술장벽, 환경 분야에 대한 타결은 일부 내용 확인을 전제로 사실상 타결이 이루어짐

·경쟁 : 동의명령제 도입, 재벌에 대한 예외 없는 공정거래법 적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정부조달 : 중앙정부 물품 및 서비스 양허 하한선을 현행 약 2억 원에서 1억 원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미국의 정부조달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였고,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미국 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하여 우리 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함

·기술장벽 : 기술규정과 표준 제·개정 시 상대국 전문가가 참여하고, 통신 장비에 대한 제품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환경 : 환경법 위반시 과징금 등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 적용, 대중참여제 도입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짐

- 타결되지 못한 쟁점 사항 : 농업, 자동차, 섬유 등 나머지 8개 분야는 쟁점 사항들을 둘러싸고 분과회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

·농업 : 한국의 쌀 등 민감 품목 등에 대한 개방 예외 요구와 미국의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에 관한 요구에 대한 상호 의견 대립이 첨예

·자동차 : 한국은 자동차 관세의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의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호 의견 접근이 어려움

·섬유 : 한국은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세이프 가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음

·기타 : 원산지, 투자, 의약품 등 8개 분야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심함

○ (한·미 FTA의 완전 타결 조건) 한·미 FTA의 완전 타결을 위해서는 자동차, 섬유, 농업 등의 분야에서의 쟁점사안에 관한 빅딜이 필요함

- **빅딜의 필요성** : 서로간의 침해한 갈등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Win-Win이 가능한 빅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한·미 FTA의 최종 타결을 위해서는 타결시한인 3월 30일 부시 미국 대통령의 근무시간 종료 전까지 미국 의회에 협정서명 의사를 통보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남은 3월26일 시작되는 장관급 회담에서 전체 최종 타결을 이루어야 함
- (향후 전망) 미국은 신속협상권이 마감되는 3월 30일 이전에 일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국은 미국 의회와의 재협상을 피하기 위해 서라도 적어도 ‘낮은 수준의 타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 실익추구 협상 추진** :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외적 문제를 제외한 실익위주의 협상으로 이익이 없으면 체결이 불가능하며, 시한과 협상 수준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해 한국은 철저한 실익추구의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신속협상권 마감 전 일괄 타결 시도** :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동북아 거점 확보를 노리는 미국 부시 정부로서는 양국간 FTA 협상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따라서 신속협상권 마감 전에 쟁점 사항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임
 - **전망** : 한·미 양국은 신속협상권 기간 내 쟁점사항을 제외한 부분적인 타결이나 쟁점 사항 개방 시기의 연장을 동반한 타결 등 낮은 수준의 타결을 이룰 가능성이 크나, 쟁점사항 빅딜에 의한 완전 타결 가능성 또한 여전히 남아 있음
 - 낮은 수준의 타결 가능성 고조** : 농업, 섬유, 자동차 등에서의 쟁점 사항을 제외하거나, 상호 개방 시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완전 타결이 아닌 낮은 수준의 타결 가능성이 큼
 - 쟁점 사항 빅딜에 의한 완전 타결 가능성 존재** : 다만, 한·미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양국 모두 미국의 신속협상권 기간 내 타결을 원할 것이며 쟁점사항에 대한 빅딜을 통해 완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음

< 한·미 FTA 진행 상황 17개 분과 >

2007년 3월 23일 현재

분과	주요 타결 내용과 쟁점 사항	타결 여부
경쟁	- 동의명령제 도입 - 재벌에 대한 예외 없는 공정거래법 적용 - 독점기업에 적용되는 상업적 고려의무대상에서 공공요금 제외 등	완전 타결
정부조달	- 미국 주정부, 한국 지방정부·공기업은 제외 - 입찰최저가격 1억 원 - 학교급식 제외 - 입찰 참여시 과거 미국내 수주실적 적용 금지 - 조달 대상에 민자 시설 포함(중소기업 보호조항 신설) 등	
기술장벽	- 기술규정과 표준 제·개정시 상대국 전문가 참여 - 통신장비에 대한 제품인증서 상호 인정 등	일부항목 확인을
환경	- 환경법 위반시 과징금 등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 적용 - 대중참여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인 참여 허가 제도) 도입 등	전제로 한 완전 타결
원산지/통관	- 통관 부문은 완전 타결 - 원산지 부문 미타결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인정(한국), 한·미 FTA는 한·미 영토 내 제품 대상(미국)	통관 및 전자상거래 완전 타결
통신서비스	- 전자상 거래 완전 타결 - 통신 지분제한 완화(미국)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장 개방(미국)	
상품무역	- 자동차 부문 미타결 : 관세 조기 철폐(한국),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 배출가스저감장치 의무장착 재연기(미국) - 의약품 부문 미타결 : 신약 자료독점권, 신약 최저가 보장 요구(미국)	부분 타결
무역구제	- 무역구제 협력위 등 요구(한국) - 법률 개정 수반 조치 불가(미국)	
농업	- 쌀, 쇠고기, 오렌지 등 민감품목 개방 예외(한국) - 예외없는 개방(미국)	
섬유	- 전 품목 5년 내 관세 철폐, 원사기준 예외, 관세특혜할당 요구(한국) - 한국업체 경영정보 제공 등 고강도 우회수출 방지책 요구(미국)	
금융서비스	- 우체국 보험 FTA 적용 요구(미국)	
지적재산권	- 저작권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미국) -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미국) - 실손배상주의 도입(한국) 등	
서비스	- 방송 부문 미타결 : 외국방송 더빙 허용, 방송콘텐츠 쿼터제 완화 :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업체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위생검역	- 전문가간 기술협의 위원회 설치 원칙 합의 등 사실상 타결	
투자	- 투자자·국가 분쟁 절차 대상에서 부동산 및 조세관련 조치 제외(한국)	
노동	- 공중의견 제출제도 남용방지 방안 쟁점 (한국)	
총칙	- 다른 분과와 연계 타결 방침	

자료 : 한·미 FTA 기획단 보도자료 및 각 언론사 보도자료 참조.

○ (한·미 FTA 타결 배경) 지역주의의 급진전, 신흥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 등에 따라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국가경쟁력의 제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선진화 또한 피할 수 있음

- 지역주의 급진전예의 대응 : 세계화의 가속과 더불어 FTA 등을 통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급진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
 -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경우 주로 무역에 의존하며, 중국 등 신흥개발도상국의 급속한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과의 경쟁력 차이의 극복을 위해서라도 FTA를 통한 시장 확보와 경제의 선진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
- 한·미 FTA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경제 성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를 통해 경쟁력 제고를 피할 필요가 있음
 - 對美 시장 경쟁력 강화 : 미국은 2005년 현재 세계 제 1의 시장(2005년 기준 1조 7,324억 달러)일 뿐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한·미 FTA를 통해 최근 하락(2000년 3.31%에서 2005년 2.62%로 하락)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점유율 상승을 피할 수 있음
 - 통상마찰 감소 : 한편 한·미 FTA의 체결로 한국은 양국간 통상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 국가신뢰도 증진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 한편 패권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당면한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정치·군사적인 리스크를 완화하여 국가신뢰도를 증진시킴으로써 외국인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임
- 국가 전체의 선진화 : 한·미 FTA의 체결로 한국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 관습 등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를 피할 수 있을 것임
 - 산업구조 고도화 기반 확보 : 선진 기술, 경영기법 등의 유치가 보다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선진 자본 유치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2. 한·미 FTA 타결의 손익계산서

1) 거시경제에의 영향

○ (긍정적 영향) 한·미 FTA 체결로 한국은 생산 및 고용 증대 효과, 후생 수준 증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통해 개방된 선진 경제 달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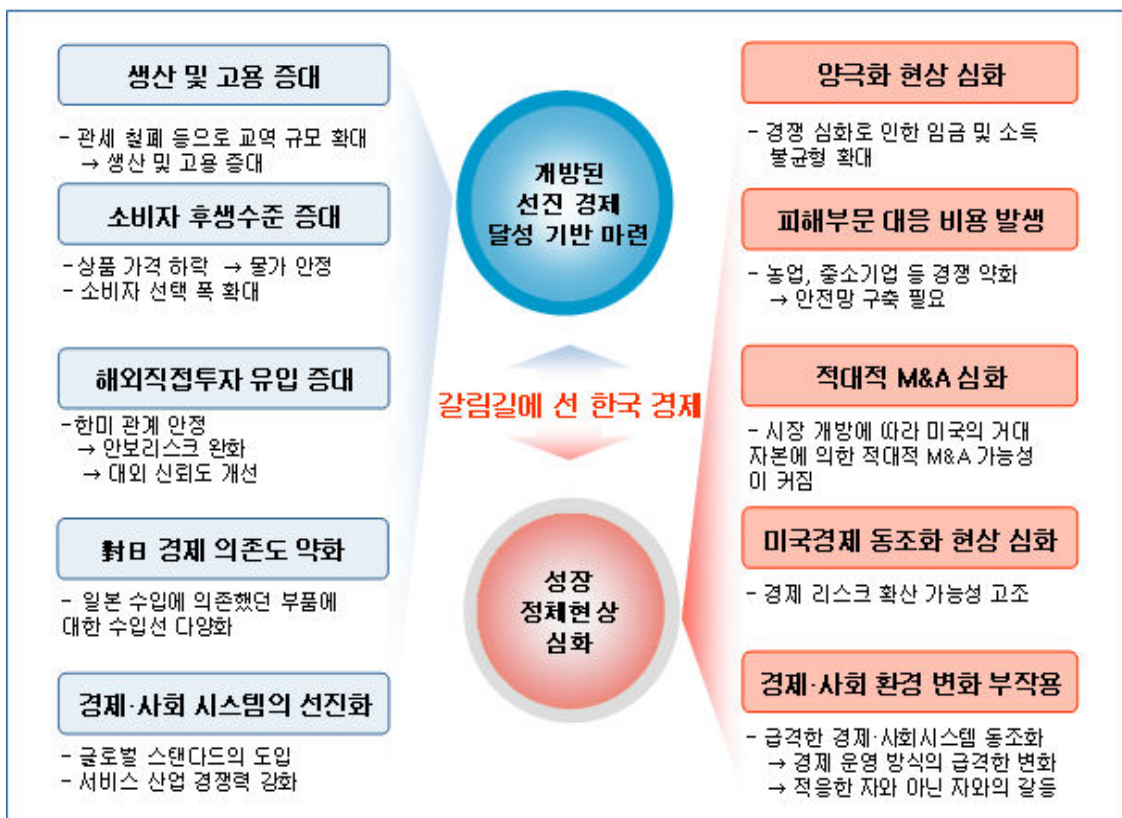
- 생산 및 고용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 기여 : 관세 철폐, 기술의 상호 보완 등의 효과는 교역 규모의 확대를 유발할 것이며, 이는 곧 생산과 고용 증대 등의 효과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임
- 후생수준 증대 : 한·미 양국간 교역 규모의 확대는 상품 가격 하락을 통한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시켜 후생수준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 대외신뢰도 개선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유입 증대 : 한·미 FTA로 인한 양국간 경제 관계의 심화는 양국간 정치·외교 관계 긴밀화에 도움을 줄 것이며, 양국간 관계 안정을 도모하여 안보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대외신뢰도 개선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유입 증대 효과를 가져 올 것임
- 경제·사회 시스템의 선진화 : 한·미 FTA로 인한 양국간 경제·사회 시스템의 수렴으로 상대적인 선진화 단계가 느린 한국의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사회 시스템 선진화의 기반을 제공해줄 것임

○ (부정적 영향) 반면 한·미 FTA는 한국 내 단기 양극화 현상 심화, 피해 부문 대응 비용 발생, 미국 경제 동조화 현상 심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성장 정체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어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한국 내 단기 양극화 현상 심화 :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경쟁 심화로 경쟁력이 약한 부문과 강한 부문 사이에 임금 격차가 심화되면서 소득 불균형을 야기, 단기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피해부문 대응 비용 발생** : 농업을 포함한 미국보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 부문과 중소기업 등에서는 한·미 FTA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고 이와 동반된 실업 증가가 예상되며, 이러한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경제 동조화 현상 심화** :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양국간 경제 시스템 운영 방식의 접근으로 경제 동조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의 변화에 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므로 미국 경제 위기의 즉각적인 확산이 우려됨
- **경제·사회 환경 급변에 따르는 부작용 발생** :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각종 제도의 변화, 급격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 양국간 급격한 경제·사회의 동조화는 각 변화에 대처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임

<한·미 FTA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산업별 영향

(1) 한·미 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¹⁾

○ (한·미 FTA의 관세, 비관세 효과) 한·미 FTA의 체결에 의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 한국의 제조업은 긍정, 중립, 부정의 세 가지 영향을 받는 그룹으로 나누어짐

<한·미 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현황>

영향	대분류	중분류	관세철폐	비관세 장벽	평균 관세율	
					한국	미국
긍정	자동차	승용차	수출 및 수입증가	통상관계 개선 배기량기준 세제 폐지	8	2.5
		화물차	수출증가		10	25
	철강산업	철강산업	영향미비	반덤핑 규제 완화	0	0
	섬유산업	섬유산업	수출증가	-	10.7(9.3)	10.9(13.1)
	부품소재	부품소재	수출증가	-		3.5
중립	전자제품	가전제품	수출증가	반덤핑 남발 및 상계관세 부가완화	8	2
		산업용 전자	수입증가			
		전자부품	영향미비		0	0
	신발산업	신발산업	영향미비	-	10.2	11.1
	제지인쇄	제지인쇄	영향미비	정부보조가 줄어들어 보조금 증가	0	0
부정	기계산업	일반기계	수입증가	-	6.4	1.7
		전기기계	수입증가	-	6.7	3.0
		금속제품	수입증가	-	8.0(6.8)	2.9(2.7)
	화학제품	석유화학	영향미비	-	6.1(5.34)	4.3(3.23)
		정밀화학	수입증가	-	6.87	2.64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미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 2007년; 장석인 외,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산업연구원, 2006년의 자료를 재정리.

주 : () 안의 수치는 가중평균 관세율임.

1) 전국경제인연합회, 『한·미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 2007년; 장석인 외,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산업연구원, 2006년; 오영석 외,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산업연구원, 2006년 참조.

○ (긍정적 영향) 한·미 FTA는 제조업 중 자동차, 철강산업, 섬유산업 등의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 : 한·미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되고, 비관세 장벽 완화로 통상 문제가 원활해짐에 따라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승용차) 한·미 FTA를 통해 미국시장에서의 자동차의 관세가 철폐되면, 승용차의 추가적인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내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의 차 가격이 저렴해지므로 수입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화물차) 화물차의 경우 미국은 25%의 높은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으므로, 한·미 FTA가 체결되어 관세율이 폐지되면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리게 됨
 - 그러나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가 철폐될 경우,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증대할 가능성이 상존함
- 철강 : 관세 폐지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는 미미하지만, 미국의 한국 철강 수출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완화되어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2004년부터 철강재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및 수입 증대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한국의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 대다수 품목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어 비관세 장벽이 완화될 경우, 수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음
- 섬유산업 : 관세 폐지로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며, 또한 섬유분야 비관세 장벽인 Yarn Forward²⁾의 규정이 약화될 경우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단순평균 관세율은 양국이 비슷하지만, 가중평균 관세율은 미국이 13.1%로 우리나라 9.3%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율이 폐지되면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제고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섬유분야 비관세 장벽인 Yarn Forward로 정의되는 엄격한 의류원산지 규정이 약화될 경우, 수출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부품소재 산업 : 관세 폐지로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對日 수입에 의존하였던 부품소재에 대해 對美 수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수입선이 다양해질 수 있음

2)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가운데 하나로 섬유 완제품에 들어가는 기초원자재인 '실'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는 제도임.

○ (중립적 영향) 한·미 FTA는 제조업 중 전자제품, 신발산업, 제지인쇄업 등의 분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

- 전자제품 : 관세철폐로 인해 가전제품의 수출은 증가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산업용 전자제품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가전제품) 미국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출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TV의 경우 5%대의 높은 관세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한국의 관세가 높고 미·일간 경쟁력이 비슷한 영상기록매체, 카스테레오, 전구부품, 카스테레오 등이 對日 수입에서 對美 수입으로 전환(무역전환 효과)되어 수입선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음
 - (산업용 전자) 미국은 산업용 전자제품에 대해 대체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관세가 철폐되어도 수출증대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의 관세는 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자 계측기 및 기타 계측기, 물리화학분석기, 계측기 부품, 기타 의료용 전자기기 등의 수입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전자부품) 전자부품은 한·미 양국이 이미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어,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되어도 수출과 수입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완화로 과다한 반덤핑 남발 및 상계관세 부과가 약해져 그동안 미국과의 반덤핑 문제로 시달렸던 국내 업체들의 수출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신발산업 : 양국의 관세가 철폐된다고 해도, 대부분의 신발업체는 중국 등에 진출해 있어 수출 및 수입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에서 우월할 수 있음
- 제지인쇄 : 2004년 이후 한·미 양국의 제지인쇄 산업의 관세율은 0이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된다고 해도 수출 및 수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제지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어, 비관세 장벽의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제지 산업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부정적 영향) 한·미 FTA는 제조업 중 기계산업, 화학제품 등의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기계산업 : 기계산업의 관세율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될 경우, 기계산업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일반기계) 관세가 철폐될 경우, 미국은 거의 무관세(1.7%)이므로 수출 증대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의 수입관세는 6.4%로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기기계) 한·미 FTA로 관세 장벽이 철폐되면 한국의 관세장벽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관세 및 對美 수출입구조를 살펴볼 때, 범용 전동기, 차단기, 변압기 등이 수출 증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됨³⁾
 - (금속산업) 한국의 수입관세는 8%로 한·미 FTA로 양국의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비관세 장벽) 미국은 판매상 및 수입업자가 요구하고 있는 UL 마크⁴⁾의 기술 장벽 및 덤핑 마진 계산 시 제로잉 제도⁵⁾를 도입하였고, 연방 및 주 단위에서 중소기업 및 자국 기업 우대정책으로 외국기업의 입찰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Buy America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 비관세 장벽은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무역전환 효과) 한편 한국의 기계류 수입은 일본과 미국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 한·미 FTA 체결 후 일본으로부터 수입 비중이 컸던 반도체 제조용 기계, 내연기관 및 터빈, 펌프 및 압축기 등의 對美 수입이 증가하는 무역전환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화학제품 : 화학제품의 관세가 철폐되면,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에 큰 변화가 없지만 정밀화학의 경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석유화학) : 관세가 철폐되어도 수출과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한·미 FTA에 따른 경쟁축진효과를 통해 생산이 확대될 전망
 - (정밀화학) : 전반적으로 미국의 정밀화학에 대한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수출 증가는 미미하고, 수입 증가는 클 것으로 예상됨
 - (무역전환효과)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했던 석유화학 기초화합물, 합성수지, 도료·잉크, 화장품·향료 분야는 對美 수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큼

3) 정만태,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산업연구원(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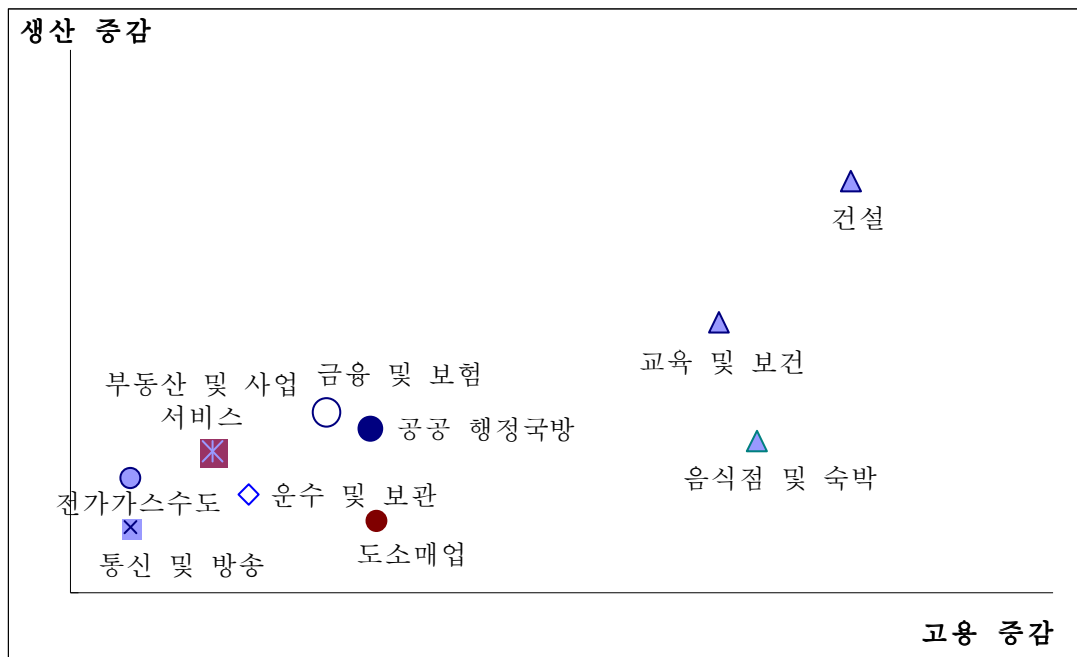
4) UL(Underwriters Laboratories) : 미국 상품의 안전을 인증한 것으로 인증대상은 전자/전기기기 및 부품류, 기계류, 건축자재 및 건설기계류, 소화용기계류, 선박용 등 6가지 대분류임.

5) 제로잉(Zeroing) :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만 덤핑 마진으로 산정하고, 수출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하여 덤핑관세율을 높이는 국내산업 보호 장치임.

(2) 한·미 FTA가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영향)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의 서비스업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로 서비스업 경쟁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생산과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한·미 FTA가 서비스업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료 : 김승택 외, 『FTA로 인한 무역피해 근로자 지원방안 연구』, 노동연구원, 2007년에서 재구성.

- **외국인 투자 활성화** : 투자와 서비스 부문 추가 개방 및 제도 개선에 따른 외국인 직접 투자의 증가는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키며, 또한 미국의 선진 기술의 이전을 통해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유통업** : 해외의 생산성 높은 유통업체의 국내 진출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져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며, 국내 유통업체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고용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996년 유통 서비스업 개방 이후, 국내 유통 산업의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 감과는 달리 한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세계 1, 2위 위치에 있는 월마트나 까르푸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함

- 오히려 경쟁을 통해 선진 기술이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시스템의 효율화와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짐
- **건설업** :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한·미 FTA에 의한 생산 증대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문에 고용 역시 서비스업 중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건설업은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 개방으로 인한 매출 증대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금융 및 보험** : 현재 한국 금융 산업의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한·미 FTA에 의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다양한 금융기관이 한국에 들어와 국내 금융기관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부정적 영향) 한국의 중소 서비스 업체들은 미국에 비해 가격 및 품질 경쟁력에서 뒤떨어져 있으므로 한국의 서비스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서비스 시장에서의 퇴출** : 한·미 FTA로 서비스 시장이 개방될 경우,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자본 규모가 작은 한국의 중소 서비스업체들은 가격 경쟁 및 품질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되어 서비스 시장에서 퇴출할 가능성이 있음
 - **손해배상금 증대** : 투자와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이 투자를 실패했을 경우, 투자 대상국의 규제에 의한 것으로 원인을 돌려 막대한 손해 배상금을 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음
 - 한·미 FTA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또한 투자와 관련해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D)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됨
 - 이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국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실패했을 경우, 투자 대상국 정부의 규제 탓으로 돌려 이를 소송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음

(3) 한·미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영향) 미국의 값싸고 질 좋은 농·수·축산물이 소비 시장에 들어와 소비자의 선택을 넓혔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후생이 증대할 것이며, 또한 미국 상품과의 경쟁력을 통해 고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 후생 증대 : 미국의 값싼 농산물이 한국 소비지 시장에 들어오게 되므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커지게 되고, 또한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 산업의 재편 : 지금까지 보호되어 왔던 농업은 미국의 값싼 농산물과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인은 퇴출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인만이 남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음

○ (부정적 영향) 상당수 농업인의 퇴출로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고용이 불안해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공공재로써 누려왔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줄어들게 됨

- 한국의 높은 관세율 : 한국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미국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세의 철폐는 한국 농산물 시장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큼
- 국내 생산 감소 : 한국의 관세율은 산 동물을 제외하고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세율이 폐지될 경우 미국의 값싼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권오복 외(2005년)의 분석에 의하면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곡물 및 기타작물은 각각 34.93%와 24.44%가 감소하며, 육류는 4.38%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생산량 감소는 산출액을 감소시킬 것이며, 산출액 변동을 살펴보면 곡물이 7억 2천만 달러, 기타 작물이 9억 6천만 달러, 육류가 7억 8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교역 수지 적자** : 미국의 값싼 농산물의 수입으로 소비자 수요가 수입품으로 바뀌고 이로 인해 국내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곡물류 및 육류의 무역수지 적자가 각각 13억 4천만 달러와 4억 7천만 달러, 채소 및 과일의 무역수지 적자는 1억 7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고용 불안** : 값싼 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국내 상당수의 농업인이 퇴출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갑작스런 노동 공급은 한국 고용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감소** : 농업의 축소로 인해 식량안보, 홍수방지, 환경보존 등 농업에 의해 창출되었던 공익적 기능인 다원적 기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한·미 FTA가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백만 달러)

	쌀	곡물	채소 / 과일	기타 작물	산동물	육류
한국 관세율	1000	244.6	52.5	234.2	3.3	35.9
미국 관세율	7.5	1.1	0.7	1	0.4	1.7
생산량변화	1.37	-34.93	1.01	-24.44	2.27	-4.38
산출액변화	305	-724	16	-964	-612	-780
교역수지	-0.1	-1335.1	-171.4	93.0	71.2	-474

자료 : 권오복 외,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년)으로부터, 재구성.

주 : 1)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를 가정.

2) 산출액변화와 교역수지의 단위만 백만 달러, 나머지는 %임.

3)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인 측면) 한·미 FTA의 체결로 한국의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제도, 관습 등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으로 기업 경영이 투명해지고, 효율성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 :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을 통해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
 - 글로벌 시대에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사항임
 - 한·미 FTA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함으로써 기업 경영이 투명해지고,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음
- **동의명령제 도입에 따른 기업규제 완화** : 경쟁분과에서 동의명령제가 타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동의명령제도는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시정 조치에 대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제도를 말함
 - 동의명령제를 통해 기업은 그동안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데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국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음
-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따른 미국 시장 접근용이** : 정부조달분과에서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대해 타결이 이루어짐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과 미국 모두 상대국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나 2004년 기준 미국의 조달시장 규모는 3,400억 달러로 한국의 18배에 이르는 등 한국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중앙정부 물품 및 서비스 양허 하한선을 현행 약 2억 원에서 1억 원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미국의 정부조달 시장을 추가로 개방함
 -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미국 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하여 우리 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함

- **수출 통관 개선** : 원산지자율증명제도, 수입화물 신속반출제 등의 도입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음
 - 원산지자율증명제도는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입 업체가 자율적으로 작성 또는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산지증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음
 - 수입화물 신속반출제는 수입화물이 공·항만에 도착된 후 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에 반출토록 하고 수입신고서류도 화물 도착 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화물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기 때문에 한국 수출품의 미국 현지 통관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됨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인정**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가 인정될 경우,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한국 중소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對美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부정적인 측면) 국내 기업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 따른 출혈과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 가속화 요청에 따른 국내 규범, 제도, 정책 등의 변화로 혼란이 예상됨**
 - **관세 철폐에 따른 국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약화** : 그동안 미국의 수입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던 기업들은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퇴출할 가능성이 있음
 - **과다 경쟁에 따른 출혈** : 국내 시장에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그동안 내수 시장에 의지했던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들과 가격 및 품질에서 무리한 경쟁을 해야 하고, 이 때문에 상당수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약화되어 기업이 파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 가속화** : 미국의 급박한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국내 규범, 제도, 정책 등의 변화로 기업은 혼란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은 불안해질 수 있음

3. 한·미 FTA 타결 이후 국가 경제 선진화 과제

- 한·미 FTA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한·미 FTA 성공의 열쇠는 타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관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음
 - 따라서 FTA의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 영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부와 기업의 대책 수립이 긴급함

1) 정부 전략

(1) 기본 전략 : 한국 경제의 선진화 추구

- 한·미 FTA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 동북아 중심 국가 지향
- 넛크래킹(Nut-Cracking) 상태에서의 탈출

(2) 정책 과제

- 특히 한·미 FTA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① 거시 정책 : 시장경제 원리 및 사회 안전망 확립

- (시장경제 원리 정착) 일관된 경제 정책을 통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 원리에 따르는 거시경제 지표의 안정을 통해 한국 기업들에게 최적의 거시 경제 환경을 조성함

- **일관된 경제 정책** : 기업이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는 정치 논리가 배제된 일관성 있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함
- **시장 원리에 의한 거시경제지표 안정화** : 기업이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가 안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 환율, 금리 등을 시장 원리에 의해 운영함으로써 거시경제지표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함
 - 물가, 환율, 금리 등의 거시경제지표의 변동성이 크면, 기업의 영업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부는 거시경제지표의 변동성을 작게 해야 함

○ (사회 안전망 확립) 한·미 FTA로 피해를 입는 산업에 대해 구조조정 지원 및 피해 근로자를 위한 산업피해구제 제도를 마련

- 한·미 FTA는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의 퇴출을 야기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과 고용을 축소시켜 양극화의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피해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거나, 피해 근로자의 생계 보장 및 이직 지원을 위한 산업피해구제 제도 등의 안전장치의 마련이 시급함

② 산업 정책 : 부품소재 산업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

○ (산업구조 고도화)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급기지화, 기술 혁신형 부품소재 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해야 함

-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첨단기술 접목 및 기술·서비스·지식집약화를 통한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 **글로벌 공급기지화** : 원천기술 확보, Global outsourcing network 참여를 위한 부품·소재 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통해 소재
- **신성장 동력 확보** : IT 기반 융합산업, 바이오산업, 고령친화산업 등 신산업 창출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

- 제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경영 컨설팅, 마케팅 등 지식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함

- **부품소재 산업 육성** :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신제품 창출의 원천이 되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차세대 핵심부품과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R&D 투자를 늘림으로써 민간 기업의 연구 개발을 지원해야 함

○ (중소기업 육성)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경우,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 한국의 중소기업이 미국의 거대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R&D 투자를 통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 따라서 정부는 자금지원 또는 세금감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함

③ 통상 정책 : 對美 수출 시장 확대와 동북아 중심 시장 형성

○ (對美 수출 시장 확대) 한·미간 기술 협력 등으로 세계 일류 상품의 육성을 통해 한국 기업이 對美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줌

- 정부 차원의 기술 협력을 위한 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미 공동 R&D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선진 기술 도입을 가속화함
-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에 대한 홍보 등 정부차원의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을 실시함으로써 한국 기업 및 상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임

-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이 미국시장에서 수출하기 좋은 여건 조성

○ (동북아 중심 시장 형성)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동북아 경제의 산업·금융 중심지로 부상하도록 하며, 신흥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④ 노동 정책 : 노사 상생체제와 인적 시장의 국제화 유도

○ (노사 상생체제)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노동시장의 안전성을 제고해야 함

- 그동안 노사문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옴

- 노동시장의 유연성 : 정규직의 경직된 노동관계법상의 과보호를 축소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조속한 입법을 통한 고용 안정

○ (인적 시장의 국제화) 해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무관리 개선, 인적시장의 국제화 등 개방에 따른 인적 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함

-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개선 :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 인적시장의 국제화 : 미국 등 선진 인력의 흡수와 국내 인력의 해외 진출을 위해 '이민정책'과 '해외 근로자 정책'을 수정해야 함

⑤ 기업 정책 : 규제 혁파와 적대적 M&A 및 역차별 방지

○ (규제 혁파) 국내 대기업 육성을 위한 제반 규제 혁파

- 공정거래법 상의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각종 규제 등을 완화

○ (적대적 M&A 및 역차별 방지) 한·미 FTA를 통해 한국 기업이 받을 적대적 M&A 및 역차별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한국의 상법은 적대적 M&A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보호할 합리적인 방어수단이 거의 없으므로 상법 개선 등을 통해 적대적 M&A 및 역차별에 대한 방어수단을 마련해야 함

⑥ 농업 정책 : 국내 농업의 특화 산업화와 기업화

○ (국내 농업의 특화 산업화) 정부 정책을 통해 국내 농산물이 대외 경쟁력을 갖추어 고부가가치 상품이 될 수 있게 함

- 농업의 중요성 : 농업은 식량안보, 홍수 및 가뭄 방지, 공기 정화 등의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붕괴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산업임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킴

○ (기업화) 특히 미국의 기업농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규모가 갖추어진 기업농이 필요하며, 이들 기업농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함

⑦ 한·미 FTA 경제 선진화 기획단 운영

○ 노·사·정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경제 선진화 기획단을 운영함으로써, FTA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함

- 또한 선진화 과제를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들이 개방화 시대에 맞는 의식 및 가치관을 고양시킴

2) 기업의 대응 방안

- (기본 전략) 미국의 선진 기업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진 경영 능력 및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북미 시장을 개척해야 함
- (전략적 제휴) 전략적 제휴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출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거나 선진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임
 - 전략적 제휴를 맺은 현지 기업을 통해 미국 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출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함
 - 기술 제휴를 통해 미국 선진 기업들의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임
- (R&D 투자) 對美 수출에 부합하는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격 및 품질에서 미국 기업보다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R&D 투자를 해야 함
 - 관세가 철폐되고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면 제품의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야 상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 원가를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거나, 상품의 질을 높여 비슷한 가격에서의 품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R&D 투자가 필요함
- (투명 경영 추진) 기업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갖추어 기업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함
 - 기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국내 및 해외 투자자로부터 쉽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여 상품 매출을 극대화 함

임상수 연구위원(3669-4125, happylims@hri.co.kr)

<한·미 FTA 추진 현황>

날짜	내용
2003. 08	“FTA 추진 로드맵” 마련
2005. 02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1차 회의 개최(서울) - FTA 추진 절차 및 경제적 타당성 논의
2005.03.28 - 03.29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2차 회의 개최(워싱턴) - 상품분야 시장접근, 농업, 섬유, 원산지 규정,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 등 양측 GRA 협정문의 분야별 주요내용 및 정책 관련 논의
2005.04.28 - 04.29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3차 회의 개최(워싱턴) -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통신, 전장상거래, 노동, 환경, 경쟁, 투명성 등 양측 FTA 협정문의 분야별 주요 내용과 정책 관련 논의
2006.06.05 - 06.09	한·미 F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워싱턴)
2006.07.10 - 07.14	한·미 FTA 제2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06.09.06 - 09.09	한·미 FTA 제3차 공식협상 개최(시애틀)
2006.10.23 - 10.27	한·미 FTA 제4차 공식협상 개최(제주)
2006.12.04 - 12.08	한·미 FTA 제5차 공식협상 개최(몬타나)
2007.01.15 - 01.19	한·미 FTA 제6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07.02.11 - 02.14	한·미 FTA 제7차 공식협상 개최(워싱턴)
2007.03.07 - 03.12	한·미 FTA 제8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07.03.19 - 03.21	고위급 연쇄회담(워싱턴)
2007.03.26	통상장관 협상(서울)
2007.04.02	미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협상내용 통보 시한 (무역촉진권 만료 90일 전)
2007.07.01 이후	무역촉진권 만료 및 협정문 서명 시한 양국 의회 비준

자료 : 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http://www.fta.go.kr>) 참조.

<참고 문헌>

김승택 외, 『FTA로 인한 무역피해 근로자 지원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미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 2007년.

장석인 외,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산업연구원, 2006년.

오영석 외,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산업연구원, 2006년.

권오복 외,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년.

정만태,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산업연구원(2006년).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지표 성장률과 체감 성장률의 괴리 지속

○ 2006년 경제성장률(실질 GDP 증가율)은 5.0%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 또는 체감 경기를 대표하는 실질 GNI 증가율은 2.3%에 그침

- 부문별로는 재화와 서비스 수출이 연간 12.4%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에 따라, 최종 수요에 대한 성장 기여율이 2005년 59.3%에서 64.6%로 증가함
- 반면 민간소비와 총고정투자 증가율이 각각 4.2% 및 3.2%에 그침에 따라, 내수 부문의 성장 기여율은 같은 기간 40.7%에서 35.4%로 크게 낮아짐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8.4%의 고성장을 지속하였으나, 서비스업이 4.2% 증가에 그치고 건설업이 0.1%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냄
- 연간 성장률 호조에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보면 작년 1/4분기를 고점으로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이고, 내수 부문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경기 하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1/4	2/4	3/4	4/4	12월	1월	2월	
경기	경제성장률	4.2	5.0	6.3(1.0)	5.1(0.8)	4.8(1.2)	4.0(0.9)	-	-	-	
	수요	소비재판매	4.1	4.7	5.3	6.1	2.9	4.5	3.3	3.1	-
		설비투자추계	6.3	7.4	6.2	6.7	11.8	5.1	2.3	16.0	-
		건설수주	7.3	9.0	-8.5	-14.7	37.1	27.1	29.8	9.7	-
		수출	12.0	14.4	10.6	16.9	16.3	13.8	12.3	20.9	11.3
	공급	산업생산	6.3	10.1	12.8	11.5	11.3	5.2	3.0	7.4	-
		취업자수(만명)	2,286	2,315	2,258	2,341	2,331	2,330	2,299	2,273	2,267
		실업률(%)	3.7	3.5	3.9	3.4	3.3	3.2	3.3	3.6	3.7
		수입	16.4	18.4	19.7	20.4	21.1	13.0	13.8	20.5	7.5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166	61	-11	7	4	61	1	-5	-
무역수지(억\$)		232	161	13	48	25	75	13	3	12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1	2.2	2.5	2.1	2.1	1.7	2.2	
	생활물가	4.1	3.1	3.1	3.1	3.5	2.6	2.6	1.9	2.4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 다소 완화

○ (해외 금융 시장) 미 금리 소폭 상승

- 금리: 미국의 2월 개인소비지출 디플레이터의 연준 목표치 상회 전망 및 연준위의 금리 동결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가 과대했다는 인식 등으로 소폭 상승 (국채 10년물 : 4.54 → 4.58%)
- 환율: 유로화는 유로지역의 1월 무역수지 적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달러화에 대해 강보합세, 엔화는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동결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크게 완화되면서 약세 시현 (\$/€ : 1.3318→1.3331, ¥/\$: 116.73→118.13)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상승, 환율 하락

- 주가: 글로벌 증시가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순매수 등으로 전주 대비 약 20p 상승 (1,427.9→1,447.4)
- 금리: 미 연준위의 금리 동결 및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등으로 소폭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4.79→4.75%)
- 환율: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및 중국 인민은행 총재의 추가 외환보유액 비축 중단 발언 등으로 역외 거래자가 미 달러화를 매도하면서 원화 환율은 전주말 대비 하락 (944.5→937.9)

○ (전망)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다소 완화되면서 엔화의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주요 금융 지표 >

		2005		2006				2007	
		3/4	4/4	1/4	2/4	3/4	4/4	3.16.	3.23. ¹⁾
국내	거래소 주가	1,221.0	1,379.4	1,359.6	1,295.2	1,371.4	1,434.5	1,427.9	1,447.4
	국고채3년(%)	4.60	5.08	4.93	4.92	4.57	4.92	4.79	4.75
	원/달러	1,041.1	1,011.6	971.6	948.9	946.2	929.8	944.8	937.9
해외	DOW	10,569	10,718	11,109	11,150	11,679	12,463	12,110	12,461
	Nikkei	13,574	16,111	17,060	15,505	16,128	17,226	16,744	17,419
	미국채10년(%)	4.32	4.39	4.85	5.14	4.63	4.70	4.54	4.58
	일국채10년(%)	1.48	1.48	1.78	1.93	1.68	1.69	1.59	1.56
	달러/유로	1.2026	1.1849	1.2118	1.2790	1.2674	1.3199	1.3318	1.3331
	엔/달러	113.51	117.75	117.78	114.42	118.18	119.07	116.73	118.13
	두바이(\$/배럴)	56.32	53.19	59.16	67.17	57.33	56.71	57.24	57.90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3..22.) 기준